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인터뷰

이재진 한국언론법학회장

심리학브런치

좋은 관계, 해로운 관계

언론사람 200호 특집

언론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2017.02

Vol. **200**





2009년 TV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촬영지 중 한 곳이었던 남태평양의 섬, 뉴칼레도니아도 덩달아 유명해졌다. 포토워크숍이 그 곳에서 열려 진행자 겸 강사로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천국에 가장 가까운 섬'이라는 별칭이 아깝지 않았다. 해안을 산책하다가 공중돌기를 연습하고 있는 청년을 만났다. 내 손에 든 카메라를 일별하더니 더 우아하게 허공에 몸을 날리기 시작했다. 끝도 없이. 나도 정성을 다해 엄숙하게 셔터를 눌러야 했다. 끝도 없이. 내 카메라 때문에 공중돌기를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중돌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찍고 있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20번을 넘기자 청년이 탈진해서 쓰러지기 전에 자리를 떠던 기억이 난다. 빠른 셔터속도(400분의 1초) 덕분에 중력도 무시하고 저 자리에서 멈춘 이 사진을 꺼내 볼 때마다 청년도 나도 도를 닦았다는 기분이 든다.

20년 언론법 연구자, 언론법의 의미를 말하다

이재진 한국언론법학회장

(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현) 제9대 한국언론법학회장

2009년 제8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주요저서: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2015),
표현, 언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2011),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2009) 등 다수



66

언론법학회장에 취임한
이재진 교수를 만났다.
겨울방학을 맞아 교정은 한산했지만
언론자유부터 명예훼손까지
지난날의 연구성과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얘기하는
그의 얼굴에는 열정이 넘쳤고
연구실의 열기는 뜨거웠다.
언론법 외길 인생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99

Q |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교수님이시죠?”라고 물을 것 같은 인상입니다. 원래부터 언론학자 내지 교수가 되고자 하셨나요?

A | 비슷한 질문을 학생들로부터도 많이 받곤 하는데, 사실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때 기자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평원순 교수님의 언론법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평원순 교수님은 한양대에 계셨는데 서울대 강의로도 하셨거든요. 옛날 대학 강의가 대개 그렇듯 좀 지루하고 딱딱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다 꾸벅꾸벅 조는데 나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들었습니다. 가끔 질문도 하구요. 그러면

교수님이 “자네는 어떻게 아는 것이 그렇게 많은가?”라고 칭찬해주셨습니다. 평원순 교수님의 만남, 이것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저로 하여금 언론법학자의 길에 들어서게 한 것 같습니다.

Q | 20년 가까이 언론법 연구를 계속 해오고 계신 셈인데, 우리나라 언론법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듯 합니다.

A | 생각보다 우리나라 언론법 연구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961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방송학과가 홍익대학교에 생겼는데 당시 개설된 과목 중에 언론법제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언론법 연구의 역사가 이미 반 세기를 넘겼습니다. 1969년에는 언론법 연구 1세대라 할 수 있는 장용 교수님의 <언론과 인권>이라는 단행본이 발간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알권리, 언론 관련 미국 판결 등을 다뤘는데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입니다.



▲ 장용 교수의 <언론과 인권> (1969)

▲ 광원수 교수의 <메스컴유니케이션 법제이론> (1984)

Q | 제9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언론법 연구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A |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정치·경제·문화·법과 같은 다양한 사회 제도들이 조화롭게 기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때문에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어떻게 인식하고 보도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합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법 연구의 의미는 바로 언론이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Q | 언론법의 의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보도 내용이 진실하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알고 있으시죠?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세에는 진실이 크면 죄도 컸습니다. 진실하게 보도했어도 사안이 중대할수록 죄가 무거웠던 시대였죠. 그러던 중 1733년 <뉴욕 위클리 저널>의 발행인이었던 존 피터 쟁거가 새로 부임한 총독과 그 부하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해 기소되었지만 최종

적으로 '보도 내용이 진실이면 무죄'라는 배심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쟁거 판결은 언론자유에 관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Q | 언론법 영역에서 현재 논의할 만한 주제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개인적으로 '공인 이론'을 꼽고 싶습니다. 1960년 <뉴욕타임스>가 미국 남부 지역의 흑인 탄압에 항의하고 인권운동을 지지하는 광고를 실었는데, 당시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의 경찰국장이었던 설리반이 이 광고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의 연사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갖고 보도하지 않는 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설리번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공인 관련 보도의 경우 보도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거나 현실적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언론의 악의성 내지 보도의 허위성은 공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공인 이론은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공인 이론은 미국에서 발전했지만 언론자유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올해로 공인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인의 개념, 공인 이론의 발전과정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공인의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해 언론법학회 첫 학술대회는 '공인'을 주제로 열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언론과 공인'을 주제로 책을 쓰고 있고요. 종전에는 공인 관련 연구가 주로 판결 분석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자들이 공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인 관련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Q | 최근 가짜뉴스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명한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A | 예전에는 뉴스 소비가 생산자 중심이었습니다. 뉴스를 만든 주체와 출처가 중요했죠. 물론, 이 시기에도 잘못된 기사가 있었지만 신뢰도나 진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산이 아닌, 유통이 관건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가짜뉴스 유통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며 유효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가짜뉴스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생산자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국내의 경우, 포털을 통해 대부분의 뉴스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포털사가 관련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 끝으로 언론법 연구자로서 보시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조정제도의 의의는 무엇인지요.

A | 제 박사학위 지도교수님이신 로버트 스펠만 교수가 변호사이자 심층취재 담당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이 분의 연구성과 중에 국가에 의한 언론규제가 느슨해지면 개인에 의한 언론소송이 증가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명예훼손소송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사람들이 언론소송을 통해 진정으로 얻기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사과를 받는 것'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언론조정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빠른 구제를 돕고 있는 매우 의미있는 장치이며 그런 점에서 조정, 중재제도의 활성화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조정제도가 법원 재판처럼 운영되는 면이 있는데 이런 점만 개선해나간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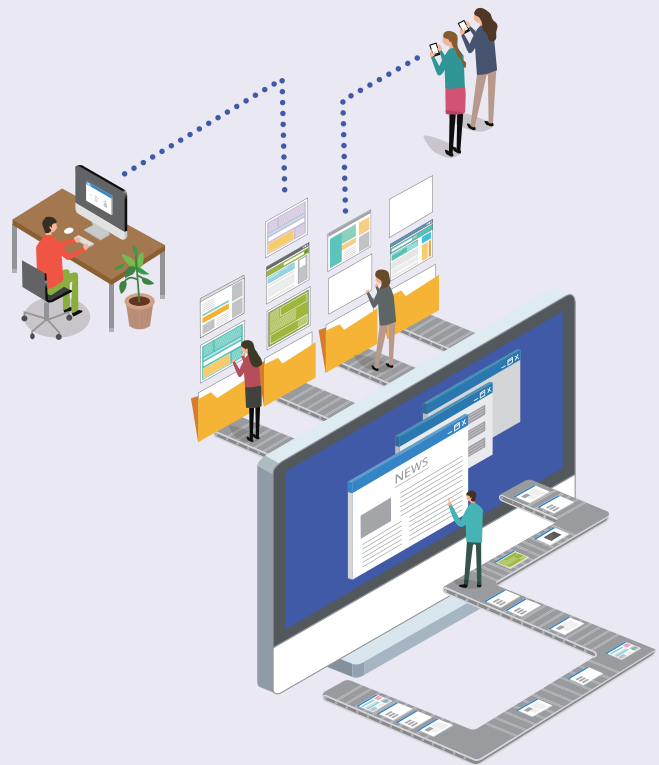
뉴스 트러스트 사업: 뉴스 알고리즘의 새로운 대안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극히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보다 더 적합한 말은 찾을 수 없는 듯하다. 단 하나의 이슈에 대해 몇 시간 안에 수백에서 수천 건의 기사가 생산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뉴스와 정보가 짧은 시간 안에 쏟아져 나오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렇다면 수많은 언론 보도 중에서 우리는 어떤 기사들을 봐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뉴스 알고리즘이다. 현재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이 각각 뉴스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 알고리즘¹⁾은 생산된 수많은 기사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기사들에 우선순위를 매겨, 우리가 보는 컴퓨터·모바일 기기 화면에 일목요연하게 배열해준다. 우리는 순차적으로 배열된 기사들 중에서 대체로 화면 상단에 뜬 일부 기사를 위주로 살펴봄으로써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따라서 어떤 기사가 화면 상단에 올라오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기사가 상위에 올라오는지 의식하지 않고 소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의문을 갖는다 해도 이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언론인들조차도 특정 기사가 상대적으로 양질의 기사라고 판단됨에도 화면상에 배열된 순위가 낮은 경우 왜 그러한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트래픽을 높일 수 있는 선정적인 기사들이 상위에 배열되기도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선정적인 기사의 양산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널리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뉴스 검색과 이용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뉴스 트러스트 위원회가 2016년 5월 출범했다. 뉴스 트러스트 위원회는 저널리즘 가치 중 '신뢰성'을 최상위 개념으로 하여, '진실성(사실성, 투명성, 다양성, 균형성, 독창성)', '유익성(중요성, 심층성, 독이성, 유용성)', '윤리성(선정성, 반복성)' 등의 하위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뉴스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주관 하에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본 위원회는 2016년



12월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간의 활동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추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뉴스 알고리즘의 개발 과정과 결과물을 일반에 모두 공개할 계획이며, 카인즈(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구축한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당 알고리즘을 구현해볼 예정이다.

뉴스 알고리즘 개발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해당 기사가 어떤 이유에서 상위에 배열됐는지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알고리즘 요인을 변경하여 뉴스 플랫폼에 더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기사의 심층성보다 중요성에 더 큰 의미를 둘 경우 중요성 요인이 더 많이 반영된 기사가 상위에 배열되도록 하는 등 이용자가 보다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는 언론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나 미디어 스타트업 등이 공개된 뉴스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토대로 원하는 뉴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6: 한국〉(한국언론진흥재단, 2016)에 따르면,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 대상 25개국 중 22위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 알고리즘 사업을 토대로 신뢰도 높은 기사가 더 많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결과적으로 신뢰도 높은 기사가 더 많이 생산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는 결국 공공담론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뉴스 생태계가 보다 건강한 공론장으로 변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1) 연동 **사람** 2016년 4월호 <미디어트렌드>코너의 '로봇 저널리즘'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뉴스 알고리즘이 기사 생산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미 생산된 기사들을 분류, 서열화, 배열하여 유통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후자를 의미한다.

좋은 관계, 해로운 관계

인간 관계로 인해 마음을 다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그만두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물론 어떤 관계를 끊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밥벌이를 해야 하니 보기 싫은 직장 상사를 매일 봐야 하거나 진상 고객을 참고 견뎌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아이 때문에 어색한 사이의 학부모를 마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인데 아예 안 보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는 달리, 마음만 굳게 먹으면 충분히 멀리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연을 끊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내 삶에 독이 되는 사람을 끊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반드시’ 또는 ‘절대로’와 같은 의무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탓이 큼니다. 어렸을 적 술 먹고 나를 때리기만 하다가 집을 나간 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여러 요구를 하면 자식은 그간의 원망을 뒤로하고 시키는 대로 하기도 합니다. 나는 반드시 효도를 해야 하고, 절대로 불효막심한 자식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만날 때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친구가 사는 게 힘들다면서 연락해오면 나도 바쁜데 한 시간째 하소연을 들어 줍니다. 괜히 친구가 나를 저버렸다고 할까봐 불안합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아서도 안되고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이어서도 안되니까요. 남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만날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이런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를 저버리면 나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입시키고,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더욱 자기 마음대로 주변을 조종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남을 신경 쓰는 그 마음 때문

에 사람들과 더 많이 얽히고 막상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힘도 체력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직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지 못하죠.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걸 꼭 참고 있다가 어린 자녀, 부하 직원과 같은 약자에게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직장 동료가 집에서는 좋은 부모일 수도 있고, 속 썩이는 자녀가 학교에서는 교우관계가 좋기도 합니다. 늘 나쁜 사람도 늘 착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화풀이하기 쉬운 사람을 위해서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직설적인 충고를 한다고 꼭 안 좋을까요? 나에게 애정을 많이 표현한다고 무조건 좋을까요? 나와 취미가 같으면 좋을까요? 물론 그런 것 하나하나가 나와 잘 맞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자존감을 높이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낮아지게 하는 사

람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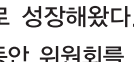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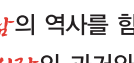
자존감을 간단히 말해 나 자신에 대해 ‘이런 점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정의할 때, 사실 이것이 사람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나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스스로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관계를 위해서나 자신을 회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더 못난 사람 같고, 스스로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아 괴롭다면, 실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돈이나 외모를 보고 계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함께 하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이전에 나 자신이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이니까요. 사람 사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좋은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스스로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스페셜 대담

언론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원회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이 200호 발간을 맞았다. 2000년 7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이름의 소식지로 창간된 뒤 <PAC NEWS>를 거쳐 오늘날의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으로 성장해왔다. 담당자들의 수고와 애정 없이는 16년 동안 위원회를 대표하는 대외홍보지로서의 역사를 이어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200호 발간을 맞아 **언론  사람**의 역사를 함께 했던 지난 담당자들과 함께 **언론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대담에

참여한 분들



여운규 총무팀장
2008.1. ~ 2010.12 홍보팀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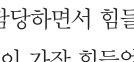
박혜진 조사팀 차장
2014.1. ~ 2015.12 홍보팀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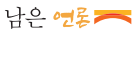
남승균 연구팀 차장
2011.1. ~ 2011.12 홍보팀 근무

여 | 제가 담당했던 시기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2009년 10월호까지는 직원들 간 소통을 위한 내부 소식지였는데 11월호부터 대외홍보지로 바뀌었어요. 독자가 직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된 거죠. 제호도 <PAC NEWS>에서 **언론  사람**으로 바뀌었고 발행부수도 600부에서 10,000부로 확대됐어요. 내용면에서도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읽을거리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박 | 맞아요. 내부 소식지는 위원회 소식과 직원의 기고글로 채워진 반면, 대외홍보지는 위원회 소식을 한 두 페이지에 요약해 실었어요. '일반 독자들이 자세한 위원회 소식을 궁금해할까'라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2015년도부터는 다양한 읽을거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면서 3면에 위치하던 <위원회 소식> 코너를 14면으로 옮겼어요.

진행 | 대외홍보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네요. **언론  사람**을 담당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박 | 표지 사진 선정이 가장 힘들었어요. 표지에 풍경 또는 인물 사진이 주로 들어갔는데 월간지니깐 계절감 있는 이미지가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었어요. 봄에는 꽃, 여름이면 바다, 가을이면 단풍, 겨울이면 눈, 이런 식의 반복적인 이미지가 아닌 색다른 이미지를 찾는 게 어려웠어요. 2014년도에는 언론과 국민 간 소통을 주제로 다리가 들어간 풍경 사진을 넣었는데, 선택의 폭도 좁고 멋진 사진을 찾는 게 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진행 | 가장 기억에 남은 **언론  사람** 콘텐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여 | 제가 담당자가 되어 처음 만든 대외홍보지가 기억에 많이 남아

요. 위원회 창립 29주년 기념호에 1981년 3월 31일 위원회 창립 당시의 신문기사를 담았어요. 그 해 12월호 특집기사도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는데, '위원회 10대 뉴스'를 선정해 한 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남 | 간혹 지면이 남으면 <이런애기 저런애기> 코너를 제가 썼어요. 우연히 2011년 3월 31일이 에펠탑 완공 122주년이자, 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에펠탑과 위원회를 엮어 글을 써봤어요. 만년필을 주제로 쓴 글은 전 중재위원회에서 잘 읽었다는 피드백과 함께 밥도 사주셨어요. 당시에는 마감 압박에 시달리며 글까지 쓰라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추억이 되었네요.

진행 | 요즘의 **연론**  **사람**은 어떠한가요?

여 | 텍스트가 많아요. 연간 기획으로 고정된 코너가 많아 구성의 다양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2017년도에 새롭게 기획한 클로즈업 코너처럼 짧지만 소소한 읽을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남 | 글자체나 텍스트에 곁들여진 일러스트는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요. 증면을 통해 지면을 여유롭게 구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박 | 증면은 조심스러워요.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여러 면에 나눠서 담으면 지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한데 질 좋은 이미지와 일러스트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요.

여 | 요즘 종이로 간행물을 만드는 곳이 많지 않죠. 블로그에 **연론**  **사람** 콘텐츠를 싣는 방법도 있어요. 블로그가 모든 홍보 콘텐츠의 최종 집산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신 페이스북이나 뉴스레터 등 블로그에 닿을 수 있는 통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박 | 매체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연론**  **사람**의 주요 독자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높은 연령층이 주요 독자라면 텍스트의 크기를 키워야 할 것이고, 반대로 연령층이 낮다면 '과연 종이 잡지를 사람들이 볼 것인가?'하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남 | 위원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간행물 간 주제가 겹치는 문제도 짚어보아야 해요. 물론 필자와 내용의 깊이는 다르지만 언론법제를 다루는 계간지 <언론중재>가 연성화되면서, 간혹 **연론**  **사람**과 주제가 중복되기도 합니다.

진행 |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네요. **연론**  **사람**이 앞으로도 알찬 내용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독자가 보내온

200호 발간 축하인사

김정수 KBS 제작본부 TV프로덕션1 담당국장

연론  **사람**이라는 제호가 마음에 듭니다.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보니 자칫 권위적이고 경직된 이미지일 수 있는데 제호에서부터 기관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 느껴져 좋았습니다. 기관홍보지라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겠지만 단지 기관의 성과를 알리는 데에 급급하지 않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다양한 주제의 읽을거리를 담고자 노력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PD가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작품에 진정성을 담으려고 노력하듯 매호 언론과 사람을 향한 진심을 담으시길.

강미혜 더파일 편집장

관계는 늘 어렵습니다. 그것이 다투는 관계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언론보도로 인해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그래서 더 중요하고 무겁습니다. 200호를 맞게 된 **연론**  **사람**의 제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말하는 언론이 되려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조율자로서 바르게 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딱딱한 법을 이야기하며 부드럽게 다가서려 애쓰는 분들의 수고와 노력에도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200호도 미리 기대하겠습니다.

김한솔 서울대 행정대학원 17학번

연론  **사람**의 2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법과 정책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처음 찾은 **연론**  **사람**은 최신 미디어 동향부터 언론 조정사례, 덧붙여 쉬어가는 여행수첩 코너까지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모든 콘텐츠가 들어 있어 매달 설레는 마음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호 발간이 분쟁해결기구로서 위원회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공로와 역할을 다시금 회상할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과 국민의 소통 브릿지, **연론**  **사람**의 500호, 1000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짜뉴스’ 소동



미국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일익을 담당했고, 영국 국민들로 하여금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지게 했으며, 독일 메르켈 총리의 혈통을 의심케 한 것으로 모자라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사이에 자칫 핵전쟁을 일으킬 뻔 했다는 그것. 이 가공할 대상의 정체는 바로 ‘가짜뉴스’다.

전 세계가 가짜뉴스에 소동하고 있다. 이미 언론보도에 자주 등장하고 있고, 조만간 국가적 어젠다로 부각될 지도 모를 일이다. 조속히 특단의 조치라도 취하지 않으면 큰 일 날 것 같은 이 가짜뉴스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가짜뉴스라는 말이 언제,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일단,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관련 사항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보았다.

먼저, 내용이 가짜인 경우다. 내용이 가짜인 소식 내지 정보는 쉽게 말해 거짓말이거나 유언비어에 가깝다. 이습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처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혹은 그 반대로 떠들어대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이런 거짓된 말이나 정보의 유통 및 확산 문제라면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사 이래 거짓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으니 말이다.

다음으로, 형식이 가짜인 경우다. 공신력 있는 특정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가 아닌데도 그와 똑같거나 유사한 형태로 만들면 마치 해당 언론사의 기사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특정 언론사의 기사 형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기사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형식이 가짜인 뉴스 중 일부는 법적으로 ‘위조’에 해당할 것이다. 위조는 문서 작성자의 권위 혹은 공신력을 훔치는 범죄다. 또 위조된 문서라면 그 내용 또한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떳떳하기에 자신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다.

현재 가짜뉴스 관련 논의의 초점은 유통 구조에 맞춰져 있다. 가짜뉴스가 유통, 확산되는 통로에 주목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와 같은 SNS와 포털이 있다. 각종 언론에서도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짜뉴스의 유통 및 확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

게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들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편, 유통에 따른 책임과는 별개로, 가짜뉴스의 생산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될까? 형식상 가짜의 문제 중 일부는 ‘위조’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런데 위조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의외로 많지 않다. ‘공문서’이거나 ‘권리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전문 의료진이 발급한 ‘진단서’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니 가짜뉴스가 문서위조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면 된다. 내용상의 가짜 문제에 관해서는 허위사실공표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와 같은 좀 더 많은 규정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선거와의 관련성이라든가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업무방해와 같은 부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유포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을까? 과거에는 있었다. 세칭 ‘미네르바 사건’¹⁾에 적용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¹⁾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삭제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법제도가 가짜뉴스에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취약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 유진 볼로호는 ‘미국의 헌법 역사상 거짓된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²⁾ 한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짜뉴스란 늘 있어왔던 문제라 여기고 뭘 당장 급히 만들려고 하기보다 조금은 천천히, 지금 있는 제도로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싶다.

1)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박아란, “단순 전달자와 미디어 기업 사이, 책임은 어정쩡해”, <신문과방송> 2017년 1월호, 21쪽

이 초고속 시대에 '고리타분한 옛 그림'이 무슨 대수?

“아, 칙칙해라. 이 누리팅팅한 그림들,
좀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덴마크 유명작가 개인전을 함께 돌아본 신문사 후배가 팔을 잡아끌며 묻는다. 엄청난 스케일의 최신 현대미술전을 잘 관람한 후, 같은 미술관 고서화 전시실에서 자꾸 시간을 끌자 던진 말이다.

사실 그렇다. 우리의 옛 그림, 때론 고리타분하게 느껴진다. 어둡고 근한 전시실에 빗바랜 먹그림들이 주르르 걸려있으니 칙칙하게 여길 만도 하다. 그러나 한점 한점 그 시대와 배경을 곱씹으며 감상하다 보면 스스로 빠져들게 된다.

그간 이 미술관을 찾았던 세계적 거물이며 기업가들이 ‘뭐 별거 있겠어?’하는 맘으로 관람을 시작했다가 고미술관을 둘러본 뒤론 한결같이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각국의 내로라하는 미술관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숭고한 고려불화며 옛 그림, 옛 도자기에 연신 찬사를 터뜨린다는 것.

이렇듯 우리가 세계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미술은 ‘우리만의 고유한 미술’이다. 서양미술을 답습하거나 흉내낸 미술로는 관심을 끌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다. 우리만의 정서와 미감을 또렷이 드러낸 작품만이 평가받는다. 독창성이 핵심인 것이다.

옛 선조들이 남긴 옛 그림은 진중함이 사라진 이 디지털 시대에, 극진한 예술적 작업으로서의 깊이와 절제미를 한껏 보여준다. ‘그윽한 아취란 이런 것이구나’ 무릎을 치게 한다.

그런데 한국의 고서화를 중국의 아류라 생각하고, 낮춰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물론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붓을 숨씨 좋게 다룰 줄 알았던 우리 선조들은 앞선 시대 거장의 그림을 임(臨)하거나 방(倣)하며 그 세계를 추체험(追體驗)하면서도, 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미감을 구현했다. 화면 구성이라든가 화풍에서 우리 나름의 독자성이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 이를 방증해준다. 같은 식재료를 쓰더라도 조리하는 이의 손끝에서 전혀 다른 맛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감의 차이는 한중일 그림의 궤를 달리하게 했는데, 한국의 옛 그림은 화면구성과 표현에 있어 절제미를 추구한 게 특징이다. 화폭을 꽉 채우기 보다는 여백을 많이 주고, 색채도 가급적 수묵 위주의 맑은 담채(淡彩)를 구사했다. 따라서 그림의 완벽성에선 미흡할 수 있으나 오히려 생략과 절제가 감상자로 하여금 여유로운 상상에 빠질 수 있게 한다.



강세황 강상조어. 18세기.
58.2 x 34.0cm. 삼성미술관 리움



김명국 설총귀려도. 17세기.
모시에 수묵. 101.7 x 54.9cm.
국립중앙박물관

화려한 기교의 극치를 보여주는 중국 그림과는 달리, 우리 옛 그림은 간략하고 단순하다. 심지어 무덤덤하기까지 하다. 바로 이 같은 조출함이 주는 자유로움은 신선한 공기처럼 청량하다.

물론 한국의 옛 그림 중에도 화려한 진채(眞彩)를 사용한 예가 있다. 아시아 고분벽화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고구려 고분벽화, 섬세한 품격의 고려불화, 대상의 외모뿐 아니라 인품과 성정까지 담아낸 초상화는 채색을 구사했다.

하지만 옛 그림의 본류는 선비화가들과 화원들이 일궈낸 격조 높은 수묵화다. ‘여유와 절제’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韓)민족의 만듯한 심성을 오롯이 드러낸 그림들이다. 대상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대상의 핵심을 멋스럽게 압축해낸 것들이다.

개중에는 “모든 게 초고속으로 바뀌는 이 시대에, 고리타분한 옛 그림이 무슨 대수냐”고 일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식, 스펙, 경력, 돈 따위를 남보다 더 많이, 더 잘 축적하기 바쁜 시대일수록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와 주위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지 오웰은 “현대인은 물질세계는 탐사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탐사는 잘 하지 않는다. 자기 삶에서 단순함의 너른 빈터를 충분히 남겨둬야만 비로소 인간일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옛 그림의 여백이야말로 ‘단순함의 너른 빈터’가 아닐까. 새해에는 쫓기듯 달려온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옛 그림의 빈터에서 고요히 사색에 빠져드는 시간을 종종 가져봄이 어떨지.



法治법치는

길에서 시작되나 봅니다

줍혀버립니다. 깜빡이 켜지 말고 불쑥 끼어들어야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데서나 습관적으로 경적을 울려대 근처의 다른 운전자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조금의 너그러움만 있으면 경적을 울릴 필요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경적은 사고위험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 울리는 것이 만국 공통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경적은 먼저 지나가도록 배려하거나 안심하고 차선 변경을 하라는 신호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양보와 과속을 재촉하거나 절대 양보 불가, 보복·위협 운전의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뒷 유리창에 'Baby in Car' 스티커를 붙이고서 꼭에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주행차로와 추월차로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배 제라 식의 추월차로 주행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운전자도 수두룩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조차 안전거리를 지키는 운전자 역시 많지가 않습니다. 술한 강력 단속 엄포에 길들여져서인지 교차로에서의 꼬리 물기는 고질적인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요즘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달리는 양체 운전자는 거의 없어 졌습니다. 준법운행이 비교적 빨리 정착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 안전띠를 매는 것도 최근 몇 년 사이 잘 뿌리내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길 운행과 안전띠 매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갓길 운행과 비교해 안전띠를 매고 안 매고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문제에 훨씬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등 유·무형의 국가적 비용 측면에서 보면 사고를 예방하는 것 또한 타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국일수록 사소하다고도 할 법한 교통법규 위반에서부터 예외 없이 그리고 가혹하리 만치 엄정하게 법을 집행합니다.

우리는 무법 앞에 공권력과 국가의 권위가 무릎 꿇린 자화상을 안타깝게도 거리에서 늘 봅니다. 누구의 잘못에서일까요.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삭막할 것 같지만 법치가 살아 있는 세상만큼 편안한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운전을 하거나 걷다 보면 부모인 듯한 어른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무엇을 배울까요.

아이 손을 잡은 부모들뿐만 아니라 거기엔 남녀노소 구분이 없고 몸놀림이 빠른 젊은이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렇게 길을 건넌 사람들은 건널목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슨 성취감 같은 것이 어깨너머로 보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이지만 부모가 하자는 대로 무단횡단하는 어린아이들한테서 미래를 보기는커녕 적잖이 낙담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민주시민의 기본소양을 쌓는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이라는 반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크는 아이들은 무의식중에 다시 그렇고 그런 젊은이와 어른이 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꼭 그럴 것이라는가 그들만 그럴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페어플레이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사회적 합의, 즉 모든 물은 그런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한 뼘의 틈새만 보여도 멋대로 차선을 바꾸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한 둘이 아닙니다. 방향지시등만 깜빡이면 언제 어디서든 마구 바뀌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배려, 양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운전자들일 것입니다. 대개 이런 운전자일수록 다른 차량이 방향표시등을 켜고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들면 순식간에 앞차와의 간격을

‘정당하다’고 느껴야 움직인다

영화 <설리-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보는 ‘정당함’의 중요성



2009년 1월 15일 매서운 추위 속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여객기. 그리고 전원 생존.

이 유명한 사건을 풀어낸 영화 <설리-허드슨 강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장 설리와 부기장은 가까운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라는 관제실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 여객기를 허드슨 강에 불시착시킵니다. 퇴직을 눈앞에 둔 40년 비행 경력을 가진 기장의 직감에 따른 판단이었지요. 여객기 추락 사고에도 불구하고 탑승객 전원 생존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냄으로써 기장은 국가적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추락사고의 경과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찾아야 하는 국가운수안전위원회의 청문회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청문회 장면 속에서 우리는 설득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정당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당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동그란 모양의 케이크가 있습니다. 두 아이에게 똑같은 양을 주기위해 위해 최대한 신경 써서 잘라주었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두 조각이 똑같다고 느낄까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요(먹는 것에 욕심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상대방에게 간 케이크 조각이 더 커 보인다면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정당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 아이가 케이크를 자르게하고 남은 다른 아이에게 먼저 케이크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부기장 그냥 시뮬레이션일 뿐이에요. 결과가 어떻든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기장 저들 생각은 바뀔지도 모르지.

청문회 과정에서 주인공 기장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청문위원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청문위원들의 예의 없는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하지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에게 불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시뮬레이션이라는 판단의 근거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문위원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조종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았듯이 충분히 사고 여객기를 근처 공항으로 회항할 수 있었 습니다.

기장 사고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방식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적 요소가 빠져있네요. 그 조종사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새매와의 충돌 직후 판단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청문위원 그렇다면 35초를 반영해서 다시 조종사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장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청문위원들은 기장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본인들의 판단 기준에 의해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장이 시뮬레이션 방식 자체를 거부했다면 이러한 설득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만든 판단 기준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만 그 결과가 ‘정당하다’고 느끼게 되지요.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상대의 기준에 의해 내 주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커피 좋아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동네 커피 매장에서 다 식어버린 커피를 받고 맘에 들지 않아 직원에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직원이 불친절하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라며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상을 찌푸리며 “뭐 이런 식으로 장사해?”하는 분들, 속으로만 “여기 다시 오나 봐라” 하며 가게를 떠나는 분들 등 다양하겠지요. 여기서 ‘정당성’ 프레임을 작동시켜 봅시다. 매장 안 어디든 적혀 있을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찾아 손가락으로 짚어주세요. 그것이 그 매장의 영업 기준일 것이고 아마도 직원은 머쓱해하며 커피를 다시 만들어 줄 테니까요. 그럼 이제 따뜻한 커피 드실 준비 되셨지요?

COMMISSIONERS >>> 위원동정



김재봉 부위원장, 중재위원 사퇴

김재봉 부위원장(서울제6중재부, 전 문화일보 수석 논설위원)이 1월 12일 중재위원에서 사퇴했다. 한편 김 전 부위원장은 '제5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향후 3년간 지역신문발전계획 수립 자문 대응,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우선지원 대상자 지원 기준 및 선정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준희 위원,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취임

김준희 중재위원(충북중재부, 변호사)이 1월 23일 제26대 충북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위원은 취임사를 통해 "변호사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 법률검검이로서의 역할을 수행,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집단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로써 김 위원은 향후 2년 간 충북지방변호사회를 이끌게 되었다.

지성우 위원, 언론장악방법 공청회 진술인 참석

지성우 중재위원(서울제1중재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1월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언론장악방법' 공청회에 참석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 지 위원은 진술인 4인 중 1인으로 참석해 법안에 대해 논했다.

조재연 중재위원,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조재연 중재위원(서울제1중재부, 변호사)이 1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제9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다. 임기는 2월 3일부터 1년이다.



NEWS >>> 위원회 뉴스

제1~4차 교원연수 서울·부산·광주 실시

교육운영팀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 부산, 광주사무소에서 진행된 교원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학교갈등관리를 위한 ADR과 언론대응 과정>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총 77명의 교원이 참가 및 수료했다. 교육운영팀은 언론중재제도 소개를 비롯하여 '학교관련 언론피해의 구제', '학교폭력과 분쟁조정의 이해'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교내 분쟁과 갈등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했다.

2017년도 제1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개최

기사심의팀은 1월 23일 2017년도 첫 시정권고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164건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대표적인 의결유형으로는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의 자택 주소를 상세히 공개한 보도에 대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항공기 내 폭행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초상 및 성명, 피의자 부친의 성명 및 운영 회사명을 공개한 보도에 대해 피의자와 부친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거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온라인에서 언론 사람을 만나보세요

언론중재위원회가 매일 위원회 소식, 언론 관련 이슈, 문화 정보 등을 담아 발행하는 언론 사람을 이메일 뉴스레터나 모바일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①

이메일 뉴스레터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 접속
→ 뉴스레터 신청

②

모바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신청
QR코드 입력



제1회 웹툰 공모전 수상작



도그맨 비긴즈

글/그림 장동혁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다리

언론중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은 물론 포털뉴스까지
언론분쟁을 비용 없이,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선거기사심의위원회 TEL 02)397-3151~4 FAX 02)397-3089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